



眞理正義
自我進就

濟大新聞

발행인 金澤玉 주 간 鄭大然
편집장 高榮哲 편집장 任尚繁
발행소: 제주대학교 신문사
(690-756) 제주시 아라동 산1번지
전화: (적) 54-2278, 2279
인쇄: 한라일보사

제429호 (주간)

[1954년 5월 27일 창간 등록번호 라 2497 호]
[1986년 4월 28일 제3종 우편물(나)급인가]

The Che-dai Shinmoon

1991년 10월1일 화요일

1

□대학종합발전계획 지상공청회 요지

학과신설목적·순위 타당성결여 교양교육확대 방안등도 미흡 의대·예술대 등 신설계획 신중히 재검토돼야

지난 8월 17일 기획실에서 발표한 우리대학교 종합발전계획 시안은 그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전제대인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따라서 우리 신문사에서도 지난 9월 10일자 신문에서 이 발전계획시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 '지상공청회'를 특집 기획한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지상공청회때에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을 각 항목별로 요약 정리해 보았다.

교육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하나의 추상적 방향 또는 절차가 개별적으로 제시됐다. 시대에 뒤쳐진 국가이데올로기가 계획안 전체에 흐르고 있다. '개선내용'에 교과과정과 강의에 대한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천을 검토하는 부분을 교수의 교육관념으로 삼았다고 있어 지배계층의 논리가 엮여있다.

2. 교육내용과 방법

추진방향의 경우 우열반 편성을 통한 수준별 강의를 한다는 것 그 실현이 어렵다. 교육방법의 경우 그 내용은 교육목적·대상·상호작용·평가방법 같은 특징에 따라 제시돼야 한다. 교과과정 면에서는 종전 인문·사회·자연·예체능의 4영역보다 세분, 이를 주체 또는 상관형식으로 새롭게 통합하는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 교육방법의 혁신에 대해서도 확고한 태도가 있는 학부·간 편성방식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

1. 대학의 이념과 목표

부하변화의 변화에 대한 예측-학교내부 상황의 분석-장기교육목표의 설정-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예산수립 순으로 발전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대학의 이념적 성격보다는 활동과 기능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각 이념 항목들을 유기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압과 함'이라는 것을 이념화시켜야 한다. '개선내용'의 경우 그 진술이 개선내용이라기보다는



◇지난 9월9일부터 전대법이 조성된 교내 일원에 대한 제초작업이 실시되고 있다. 모처럼 깨끗해진 학내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이 요청된다.

교양교육의 확대와 강화, 제2외국어의 다양화, 영미권 컴퓨터의 도입, 영미권 미시적 강의, 구두시험, 평가에 있어서의 합격·불합격에 의한 학생취급방식 등도 검토돼야 한다.

3. 학생정원과 학과증설

대학 및 학과증설의 목적과 선정기준, 필요성, 우선순위의 타당성이 분명하지 않으며, 졸업이후 사회에서의 취업상황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 각 학과의 정원인원은 확립적으로 돼 있으나 2천년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인력의 수급이나 학과의 특성에서 정원을 재조정해야 한다. 학생정원의 경우 2001년도 입학정원 2,760명은 그 당시 제주지역 고등학교출신자 중 우리대학교 지원자의 약 70%에 해당하는 인원이며, 이런 입학정원의 증가가 '고급 인력의 양성'에 비해할 때는 회의적이다. 미래사회와 지역여건을 감안해 각 학과의 정원을 어느 정도 줄이면서 그 감축된 인원으로서 다양한 학과를 신설할 수 있어야 한다. 학부수준에서는 학과의 세분보다 통합하면서 특성화 노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계획의 목표는 제주지역 특성을 살린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신설예정학과는 지역사회의 미래사회에 대한 예측을 반영하지 못했다. 의대의 신설은 시설과 교수요원 확보등을 고려할때 93학년도에 신입생을 모집한

다는 것은 의의가 앞서는 것이다. 우수한 여학생의 진로나 취업등을 고려한다면, 약학과의 신설이 요망되고, 제2외국어의 국제적 위상이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한의학과 설치도 검토돼야 한다. 인력수급과 학문적 배경으로 보면 미생물학과와 환경과학과의 신설도 바람직하다.

야간강좌부의 정비는 평생교육, 개방교육, 고등교육의 대중화라는 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관공문화휴양지로서의 사회변화에서 주민 및 관광객의 문화수요, 여학생 구성비의 증대를 감안하여 구체적인 지표가 설정될 수 있다면, 예술대학에서는 연극영화학과·무용학과, 인문대학에 스페인어학과 등이 우선순위를 지닐 수 있다.

사범대 발전계획과 관계없이 교육과 관계신설계획도 고려돼야 한다.

교육대학원에 컴퓨터교육전공·교육학전공·사회(성인)교육전공 등의 증설이 재고돼야 한다.

불어문학과보다는 러시아어문학과나 아프리카지역과 관련된 언어학, 신문방송학보다는 인간관계학이나 정보사회학, 또는 홍보학과의 설치도 더 바람직하며, 공과대학의 건축공학과보다는 지역계획학과나 도시공학과가 시급하고 환경공학과는 세분화 작업도 생각해 볼 일이다.

인문대학에서 외국어대학을 분리하는 방안, 외국어특성대학의 설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0월중 학사일정

△증강교과=12일 이전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
논문 1차 공개발표=8월
~12일 △교육대학원 논문
공개 구두발표=11월
~18일 △추계야라제전
=10월중

대학원 발전을 위한 세부방안 마련이 안 돼 있다. 학부와 대학원간의 연계방안은 물론, 타대학대학원과 학점교류를 비롯한 협력체제도 강화해야 한다.

4. 학사관리 계획

전주거분할모집은 현실을 고려할 때 그 시행이 어렵다. '성적평가'의 경우, 1·2학년은 상대평가, 3·4학년은 절대평가로 하는 이원화 평가를 할 경우 학년간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써머스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어학, 컴퓨터, 자격취득, 현장조사, 실습강좌를 집중시켜 교외학점 인정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게 되면 재이수자의 학점취득 기회로만이 아니라 교외학습체와 학우들의 미래수요에도 대처해나갈 수 있다.

5. 연구활동 및 지원 체계

기획실의 연구기능은 '교육연구연구소'를 신설 전문적인 연구기관으로 이관함이 바람직하다.

연구소에 조교는 물론 상임연구원을 제도적 장치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국제학술세미나의 개최나 교수회의연구회의 확대에 앞서 국내회의를 자주 개최하고 교수의 국내연구기회를 많이 갖게 해야 한다.

중앙의 통계학 연구소 연구환경의 자율성을 제정할 수 있다.

현재 각 단대에 산재해 있는 연구소(실험실)를 위주의 연구소(제외)를 연구자의 통계가 수월한 블록으로 이전,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케 하여 인력을 줄이고 재정비를 통합운영함으로써 운영비의 낭비를 방지토록 해야 한다.

상담실의 기능을 각 대학 학과의 교학행정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조교등의 전문상담요원을 확보하는 전사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학생생활연구소로 그대로 둔 채 지원적 성격인 상담기능을 강화하면서 연구기능을 병행토록 하는 것이 좋다.

6. 특성화 분야의 육성방안

유사연구소의 통폐합과

□다함께 생각해 봅시다(1) - 발전기금 모금운동

'대학주체'...말로만 떠들것인가 교수부터 앞장서 모범보이자

열악한 연구·교육 여건을 개선, 대학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다지기 위한 취지아래 3월부터 시작된 '대학발전기금조성운동'이 총 26명이 기탁, 1억1천7백4천5천7백50원밖에 조성되지 않아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등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보다 뒤늦게 4월부터 발전기금 모금을 시작한 충북대가 벌써 6억원을 넘는 기금을 조성했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학교의 실정을 쉽게 알 수 있다.

모금액수에 따라 학교의 명예가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이 운동이 이처럼 호지부진에 대해서는 발전기금조성추진위원회 구성의 문제·열악한 분회 조성·사전준비부족 등의 원인을 지적하면서 '제대신문' 8월20일자 지면을 통해 활성화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나 아직 이렇다할 대책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교측에서조차 학생의 분회비를 조성, 작은 액수라도 모아볼 궁리를 하지 못하고 몇몇 기업인의 거액만을 기대할뿐 실질적인 학내 분위기 조성엔 등한시 해온 게 사실이다. 발전기금모금운동과 관련된 행정직원회의도 김호준 회장(학장)은 '발전기금조성의 움직임이 있어온 이후 한번도 직원회의를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대학발전의 한 주체로서 발전기금모금에 전진원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다'며, "교수님들도 별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 직원들이 나선다는 것이 순서가 아니라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주체가 진지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고 답하고 있어 참여하고 싶어도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동창회의 한 관계자는 "동문회에서도 참여할 뜻을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 나가지 않았던 동문들도 자연히 따라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호총장이 9월26일부터 10월2일까지 일본 나가사키에 방문중 도쿄와 오사카에서 재일 재주출신 인사들을 만나 대학발전기금모금운동에 관한 논의를 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학교차원에서 떠나 그것도 일본에까지 가서 모금운동을 벌이는 것인만큼 그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었지만, 학내 분위기가 냉랭한 가운데 바깥에서부터 들어온 무슨 운동의 의의를 살필 수 있을 것인가. 게다가 여기서 거액을 모으라는 현실도 있는 만큼 학내 분위기를 추동적으로 이끌어 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자신과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가 떠오를때마다 교수·교직원·학생들은 각

자가 대학의 주체라고 큰소리치지만 정작 주체로서 역할을 발휘해야 할 이 운동에 대해서 서로 눈치를 보며 남다른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어느 누구를 탓해야 할지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법정대 교 모교수는 "이 운동의 결과 가장 많은 수혜를 입게될 교수들부터 적극 참여해야 하고 그에 앞서 보직교수들이 적극적으로 분위기 조성의 선두로 나선다면 어느정도 학내 분위기는 무르익으리라 본다"며 이 운동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학교측은 이 운동을 '교육적 차원'으로 끌어올릴 공리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진부한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교수회·동문회·학생회·교직원간 대학발전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주체임을 명심해야 할과 동시에 '누가 먼저 내야 한다' '누가 때문에' '적은 액수라 참피당하지 않을까' 하는 사소한 감정을 '앞세워 참여의 본뜻을 희석시키거나 왜곡해선 안 된다'.

지난 9월19일 김총장이 5백만원을 기탁한 것을 계기로 먼저 학·처장등 보직 교수들부터 발전기금모금에 동참한다면 평소교·학생·교직원들 물론이요 동문이나 지역사회 인사들도 속속 참여하게 되리라 확신한다.

더불어 연구소 연구활동분야의 재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통아리에 반드시 지도교수가 필요하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

7. 학생자치활동 및 복지

학생들에 대한 통제의 측면이 강하다. 학생들의 학술및 연구활동을 권장해야 한다.

대학자치운영협의회의 건설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학교운영에 학생들의 참여방안이 미흡하다.

서점·복사실을 직영화시켜 이익금이 학내 복지에 재환원 되도록 해야 한다.

과제도서실, 독서실, 고시반 등이 제기능을 발휘토록 지원해줘야 한다.

계획적인 조경사업을 실시

8. 교원과 직원

계획기간동안 학생증원수는 7백70명인데 비해 교직원증가수는 9백60명으로 학생증가수보다 교직원증가수가 많은데, 이는 학교의 재정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다.

9. 행정조직과 지원 부속 기관

대학본부의 조직은 가급적 축소사항으로 나가야 하며 단과대학들 하부구조의 연구·교육력을 강화해야 한다.

사대부종교의 운영은 사

대교수진과의 연대책임하에 대내 중등교육 혁신 프로그램을 연구·시범하는 연구학교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도서관 장서확보계획에 따른 실천방안이 제시돼 있지 않다.

전체교수회의의 권한을 축소하고 그 권한을 평의원회로 이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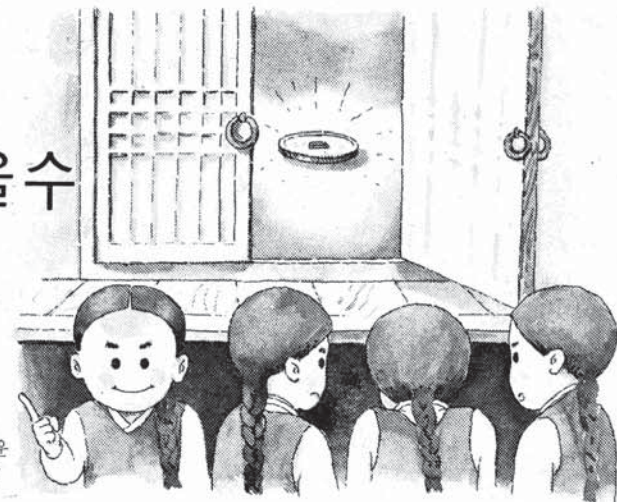
직원연수의 경우 신입직원 또는 종전 직원에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도자 훈련(LET)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학교 재정상태를 감안하지 않은 계획이다. 재정확보를 위한 지도자 훈련이 더 마련돼야 한다.

10. 행·재정제도

동양그룹은 여러분의 지체가 필요합니다

누가
동전 한 닢으로
이 방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한 닢의 동전으로 양초를 사와 그 불빛으로 방안을 가득 채운 송기로운 학동처럼, 동양그룹은 미래를 이끌어갈 청의 인재의 인재를 찾습니다.

'91하반기 대졸신입사원 및 연구인력 모집

모집부문	모 집, 해 당 학 과	모집인원
인 문	상경(경영, 회계, 경제, 무역, 통계), 법경(법, 행정, 정치, 외교), 인문(사회, 심리, 교육, 신문방송, 영어, 일어), 미술(산업디자인, 응용미술)	000명
자 연	수학, 물리, 화학, 기계, 전기, 전자, 통신, 통계, 통신, 제어, 정밀측정, 화공, 산공, 공업경영, 식품공학, 무기재료(요업), 자원, 토목, 건축, 산업위생	000명

학과	인문·사회	자연·이공
회사	경영, 인문, 사회, 법, 정치, 행정, 통계, 무역, 경제, 외교, 미술, 산업디자인, 응용미술	수학, 물리, 화학, 기계, 전기, 전자, 통신, 통계, 통신, 제어, 정밀측정, 화공, 산공, 공업경영, 식품공학, 무기재료(요업), 자원, 토목, 건축, 산업위생
동양시멘트	○	○
동양제과	○	○
동양증권	○	○
동양투자금융	○	○
동양해운	○	○
동양대	○	○
동양마트	○	○
동양정보통신	○	○
동양중공업연구소	○	○

※ 동양경제연구소 및 동양투자금융은 동양증권, 오리온프리트레이는 동양정보통신에서 총괄 채용.
※ 관련 계열 및 학과 전공자만 지원 가능.
※ 동양해운·동양대·동양마트·동양정보통신의 경우 전공 불문

지역	교 부 처	전화번호
서울	동양투자금융 서울지점 중구 을지로2가 185번지 동양투자금융빌딩 1층	(02) 771-5100
부산	동양증권 부산중앙지점 부산시 중구 중앙동 3가 1번지 부산주세국빌딩 8층	(051) 464-8284
대구	동양증권 대구중앙지점 대구시 중구 단성동 96번지 단성빌딩 2,3층	(053) 46-9001
광주	동양증권 광주지점 광주시 동구 중앙동 3가 2-1 화내빌딩 2층	(062) 226-2100
대전	동양증권 대전지점 대전시 중구 은행동 65-1 수평빌딩 2,3층	(042) 272-1500

7. 기 타
가. 우원접수는 마감일 17:00까지 도착된 동기우원에 한함.
나. 국가보훈 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 (지원사항에 명시하고 증명서 첨부시에 한함).
다. 현역복무중인자는 1991년 12월말 이전 전역 예정자에 한하여 지원가능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로 문의할 것 (전화문의: 대전지점 771-5100 (교내 250-254), (직통) 755-2080)

6.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교부) 9.10.1(화) ~ 10.11(금)
(접수) 9.10.7(월) ~ 10.11(금)
09:00~18:00(공휴일은 제외)
나. 접수처: 100-192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85번지 동양투자금융빌딩 15층 동양그룹인력관리위원회

【김미자 기자】

□ILO가입과 우리의 노동현실

한국, '노동탄압 10대국'에 속해 ILO규정에 맞게 국내노동법 개정돼야 노동악법 철폐·단결권 보장등

원경환
어업학과

우리나라는 건국43년만에 북한에 이어 1백61번째로 UN회원국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UN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13개 UN 전문기구중 12개에 가입하여 활동을 벌여왔다. 아직까지 가입하지 못한 기구는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 하나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UN가입에 이어 ILO가입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빠르면 올해 안으로 가입이 확실시되고 있다.

I. ILO의 탄생배경과 성격

ILO는 제1차 세계대전 종결후 1919년 베르사이유 평화조약 제13편 '노동'에 의거하여 탄생되며 1946년에 UN전문기구로 재편되어 150여개국이 가입,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17년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10월 혁명이 성공하자 유럽 각국에서는 노동운동이 폭발적으로 고양되고 이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노동문제에 대한 개량조치를 강요하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또한 제국주의 진영은 노동자들의 혁명적 진출이라는 상황에서 어떤 나라든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노동비 증대 등에 따른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다는 판단 아래 노동기준에 대한 국제적 협정을 맺을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ILO는 노동자 투쟁에 따른 자본가 진영의 양보를 결성된다. 이를 보다 엄밀히 말하면 플루오르는 노동자들의 혁명기세를 잠재우기 위한 개량적 조치라 할 수 있다.

ILO는 타 국제기구와 달리 각 나라별로 정부대표 2인, 노동자대표 1인, 사용자대표 1인으로 구성되는 3자구성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는 그나마 노동운동고양이라는 조건하에서 가능했음) 하지만 정부대표와 사용자대표가 아합할 경우 총회나 각종 의결모임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함으로 노동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라 할 수 없다. 더욱이 각국의 노동자대표와 사용자대표를 선임할 권한은 정부가 가지고 있으므로 만약 전국적 노동단체가 복수로 존재하면 정부는 자기 취향에 맞는 단체를 선택하여 플루오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은 부말할 여지도 없다.

또한 ILO는 현재 171개 조약과 비슷한 수의 권고로 구성된 "국제노동법전"을 국제문서로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조약은 가맹국이 비준을 하면 국제법과 같은 구속력을 지닌다. 특히 우리나라는 헌법규정(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에 의거해 노동법 자체를 ILO조약수준에 맞

춰 개정해야 한다. 이에 반해 권고는 비준을 수락하여도 국내조치의 지침이 될 뿐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각국은 모든 조약을 다 비준하는 것이 아니라 몇개만 골라서 비준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준하지 않는 조약은 각국에 구속력을 발휘할 수 없으며 설사 비준한 조약이라 할지라도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ILO가 할 수 있는 구속은 그나라 정부의 보호에 발표하는 것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 이와같이 ILO는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영에 합법주의적인 개량의 가능성에 대한 환상을 증폭시켜 노동운동의 혁명성을 거세시키려 하고 있다.

III. ILO가입에 따른 쟁점과 우리의 대응

정부가 ILO에 가입을 발표하면 가장 쟁점화되고 있는 조약은 "제87조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과 "제98조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의 원칙적용에 관한 조약"이다. 이 ILO조약에 대해

평균 비준조항수는 34개이다. (최

비준을 거부할 만한 조건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다. 앞서 말한 그의 주장은 사실 그대로이지만 전체 가입국중 제87조는 98개국이 제98조는 74개국이 비준했으며 ILO역시 "결사의 자유위원회"를 따로 구성할 정도로 위 두 조약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또 ICFTV 역시 이 두조약을 비준하고 이에 위반되는 국내법들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객관적상황은 전노협, 업종회의 등이 합법성을 쟁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ILO가입자체가 노동현실을 개선해줄 열쇠가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ILO의 성격과 한계로 인해 가입 그 자체는 별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다른 나라에서도 노조의 자체역량이 약한 경우 ILO가입이나 기본조약의 비준자체는 노동현실 개선에 아무런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옛 속담대로 ILO가입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없는 상태에서 ILO가입은 비탄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사진: '말' 9월호)

II. 정부의 ILO가입 의도

ILO는 UN가입국에는 그 문호가 관대한 반면 UN미가입국에는 가입이 무척 까다롭다. UN가입국의 경우 "ILO헌장상 의무를 정식으로 또는 무조건적으로 수락한다"라는 통지를 ILO사무총장에게 제출하기만 하면 되지만 비회원국인 경우 "총회에 참석하고 투표하는 정부대표의 2/3이상 찬성을 포함, 회기에 참석하고 있는 '노동자, 자본가, 정부' 3자대표의 2/3이상 찬성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ILO에 가입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가입절차의 복잡함보다 국내상황의 문제가 더 크다.

비교적 보수적 성향이 강한 ICFTV(우리나라의 노총이 가입돼 있음)조차 한국을 "세계노동운동 탄압 10대국"으로 지칭하고 있을 정도로 노동조건은 열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자의 요구를 무참히 짓밟는 상황에서 가입신청을 하더라도 ILO회원국은 한국을 맹렬히 비난할 것이며 결국은 부결당해 국제적 망신을 면치 못할 것을 염려하여 이에 가입신청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UN가입을 헌법규정(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에 의거해 노동법 자체를 ILO조약수준에 맞

우리나라의 노동법이 저촉되는 구체적 쟁점사항으로 "복수노조 금지, 공무원(교원)노조 활동의 금지,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제3자 개입금지,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행위행위 금지" 등이 있다. 특히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ILO조약 제87·98조에 명시되어 있는 "단결의 자유"에 대한 부분이다. 만약 이 조약을 비준하게 되면 국내의 노동법을 ILO조약 수준에 맞게 고쳐야 하므로 "복수노조 금지와 공무원(교원)노조 활동금지"를 폐기하여 그동안 불법으로 규정했던 전노협을 노총과 별도로 합법으로 인정해야 하며 전교조 역시 교원단체 총연합과 별도로 합법성을 인정해야 된다. 또 그간 전노협이 구성이던 정치투쟁을 불법단체의 불법시위활동으로 간주했는데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제3자 개입금지" 조항들을 폐기하여 전노협 지도의 정치투쟁과 전국적 연대투쟁을 인정해야 되며 그 파급효과는 정부로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최병렬 노동부장관은 제87조와 제98조의 조약비준을 유보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특정조약 비준여부는 전적으로 가입국의사 이므로 국내노동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비준하겠다. ILO가입국중 50%이상의 조약을 비준한 나라는 7개국이고

객관적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노동악법철폐와 노동자 단결권 보장을 위한 기본조약 비준 촉구 투쟁을 벌여나가 전노협·전교조 합법성을 쟁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전체 민족민주 진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개신간

『무에서 연구』

—임동규 지음

이 책은 무에서의 연구를 통해 무에서와 인류 역사와의 관계, 그리고 무에서의 인식을 통해 보다 심도있는 역사발전 법칙의 재검토를 시도하고 있으며 또한 역사발전법칙에 대한 기초적 인식에서 당해 사회가 갖는 제모순의 구조를 이해하고 제모순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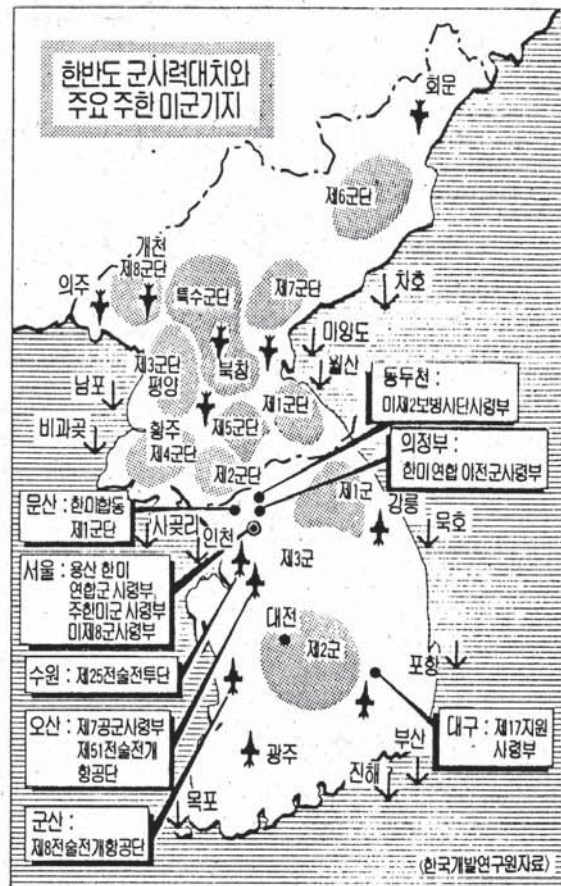
총 5장에 걸쳐 나타나는 무에서를 통한 사회구조와 제모순의 규명은 우리에게 사회 모순구조의 이해와 그 해결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화민사·6천원)

미국의 핵감축 발표를 보며

부시 미국대통령이 지상·해상 핵무기 폐기 및 철수를 발표함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술핵보유부가 명확해졌다. 소위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정책'이라 하여 미국의 핵보유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않던 그들의 입장이 탄로난 것이며 NCND정책 자체도 자동 폐기된 셈이다.

△지상발사 단거리 핵무기 전면 제거 △잠수함 및 해상발사 전술핵무기 전면철수 △전략폭격기의 비상대기 전면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비상대기 철수 △선로미사일 MX미사일 포기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발표가 정부측 입장대로 '반세계적 차원에서 세계평화를 주도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그간 우리 정부와 미국은 NCND정책에 둘러싸인채 한국내 핵무기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상태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무조건 국제원자력기구와 핵안전협정을 체결하고 국제적인 핵사찰에 응할 것'을 강하게 주권해 왔었다. 그러나 이번 부시대통령의 발



△자국의 핵은 폐기하지 않으면서 이라크·북한 등에 '핵개발 중지·핵사찰'을 운운하는 것은 강대국의 폭력이다.

주한미군 전술·전략핵 보유 자인 ‘한반도 비핵지대화’ 불투명 ‘세계평화’가장...소련팽창 사전억제

표에 따라 정부측에서도 한반도 핵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공식 선언할 것등의 민첩한 대응을 보이면서 주한미군의 핵무기 보유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는 한국주둔미군의 전술핵무기 보유량은 전문가나 연구기관에 따라 그 규모가 다르다. 85년 미핵무기 전문가 월리엄 아킨과 리처드 필드하우스가 공저로 펴낸 『핵전쟁에 의하면 한반에는 핵폭탄 6개, 8인치포용 핵폭탄 40개, 1백50mm곡사포용 핵폭탄 30개, 핵지뢰 21개가 배치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76년 미국 민간사연 연구기관 국방정보센터는 F4전폭기용 핵폭탄 1백92개, 8인치포용 핵폭탄 56개,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 핵탄두 1백44개, 에네스트 존 미사일 핵탄두 88개, 핵지뢰 25~50개가 한반도에 숨겨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지난 87년 4월 주한미군이 1천여개의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83년 미국 칼럼니스트 잭 앤더슨은 미국방부 비밀보고서를 인용, 한국에는 핵폭탄 1백33개, 8인치포용 63개, 1백55mm곡사포용 31개, 핵지뢰 21개 등 총 2백48개의 전술핵무기가 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처럼 그 규모가 어떨든 핵무기는 남한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으면서 북한측에만 핵사찰을 강요한 의도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여기서 남한에 배치된 이러한 핵전력은 남한민중을 수호하기 위함이기보다는 자국의 세계전략 수행상의 필요에 의한 것임을 간파해선 안되겠다. 또한 남한에 배치된 핵폭탄 수의 추정치가 어쨌든 한·미연합군 한반도 방어계획에는 '한·미연합군'은 필요에 따라 핵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양국간의 비밀협정에 의해 핵무기사용가능성이 배제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핵공포로부터의 탈출'은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이번의 핵철수가 전략상의 핵무기 철수가 아닌 전술상의 핵무기 철수를 고려해 볼 때 실제적인 핵무기 철수선언이 갖는 숨은 의도와 계획들을 바란 시각에서 살펴봐야 할 것 같다.

미국측의 주도로 비핵지대화의 시기가 앞당겨 질 것이라는 허상 속에서 북한의 핵개발포기를 또 한번 한반도 안정과 남북한 군축문제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리라는 예상으로 정부는 오는 10월중에 있을 남북고위급회담에 대비,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부시대통령 발표에서 강조한 것은 처럼 핵무기가 가졌던 국방력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재래식무기를 첨단과학장비로 고급화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장기적 현대화 계획이 남북의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와 그 부담이 결국 남북의 군축회담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다. 물론 일정정도의 기존 방위체계가 조정될 수는 있겠지만 핵무기를 없앴다고 전쟁의 위험이 사라진다는 보장도 없고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는한 남북관계의 개선은 지지부진할 것이 틀림없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남한 내 미군의 군축으로 군비강화를 유도하여 남북한의 대등한 수준으로 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분단의 고착화를 의도하는데 있다. 더욱이 미국이 "핵을 한반도에서 철수하더라도 한반도는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러한 것들을 잘 입증해 준다.

【고희갑기자】

해의주도 전술핵전철수선언의 배경이 최근 소련의 군사적 위협이 크게 감소하고 소련 공산주의의 내의 분열에 따른 '다시없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소련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핵감축 조치를 취해줄 것을 암암리에 요구하고 있는 정황을 보더라도 이번의 발표는 '세계평화'를 가장해 소련의 국방팽창을 무마해 보겠다는 의도로까지 보여진다.

결국 미·소간의 화해와 상호협조 관계를 더욱 확실하게 만들어 주고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사람발발에 불과하며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핵무기 철수는 어불성설이며, 핵무기가 잔존하는 한 한반도는 결코 안전할 수 없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핵은 제대로 폐기하지 않으면서 이라크·북한 등에 "핵개발하지 말라, 핵사찰하겠다" 운운하며 '국제평화'인양 행세하는 것은 강대국의 폭력이라 할 수 없다. (고희갑기자)

SAMSUNG
Electronics

『품이있는도전의세계—휴먼테크』



技動說!

지동설은 지구가 태양의 힘에 의해 공전하고 있음을 알려 주었지만, 정작 지구를 움직여온 힘은 바로 '기술의 힘'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식민지를 개척한 영국을 사람들은 '대영제국'이라 불렀고, 짧은 역사에도 풍부한 자원과 기술로 인간을 달에까지 보낸 미국을 사람들은 '세계의 리더'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패전의 고통을 딛고 어느덧 미국을 능가하는 기술을 지닌 일본을 흔히 '무서운 일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온 '세계사의 주역' 자리를 이제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때입니다. '인간행복을 위한 첨단기술—휴먼테크'의 산실, 삼성전자는 바로 그 21세기의 주인공이 될 당신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의욕의 현장입니다.

휴먼테크
삼성전자

□ 중국 사회주의의 장래와 한·중관계

사회주의 전제하에 개혁 강화 지역통합추세따라 동북아 협력체 구성 시급 민간차원 교류확대 한·중수교 길터야



○ 지난 9월 25일 동아시아 연구소와 지역발전 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중국 홍콩경제대 태평양교수 초청 강연.

다음은 지난 9월 25일 동아시아연구소와 지역발전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중국 홍콩경제대 태평양교수 초청 세미나 '중국 사회주의의 장래와 한·중

관계'의 강연과 9월 12일 있었던 산학협동연구회 제10회 연구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 '제주도 지하수 개발실태와 해결방안'을 각각 요약 정리한 글이다. <워먼이 씀>

態映梧

중국홍콩경제대 부총장

1. 제3의 길 모색: 중국식 사회주의 모델

1) 제3의 길

제3의 길이란 유럽학자들이 말하는 '제3의 길'이 아니라 '중국특색이 있는 사회주의의 길'을 가리키는 데 유럽이나 미국식 자본주의의 길도 아니고 소련식 사회주의의 길도 아니다.

중국식 사회주의의 경제적 특징은 아래와 같다.

(1) 공업화, 상품화, 현대화를 급속히 이루고 있다.

(2) 사회주의 공유경제를 주체로 다원화된 경제성분을 발전시키는 혼합경제모델을 택한다.

(3) 노동에 의한 배분방식을 주체로 다원화된 배분방식을 택한다.

(4) 계획과 시장을 결합시키는 경제메카니즘을 육성한다.

2) 중국은 왜 사회주의를 택하는가

사회주의의 도로를 택해야만이 11억 인구의 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에 입각한 것이다. 12년 개혁, 개방의 성과 역시 이 점을 충분히 실증한다.

소련 개혁의 실패는 바로 그들이 소련 국민들의 기본적 생활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와 반면에 중국의 사회적 안정은 10년 개혁이 중국의 경제를 발전시켰고 많은 국민들에게 눈에 보이는 이익을 주었기 때문이다.

영국의 학자들은 중국이 무엇 때문에 전면적 사유화를 실시하지 않는가하고 질문을 하였는데, 나의 대답은 이렇다. 즉 중국이 만약 영국의 자본주의적 특성을 본 받아서 양극분화를 조성한다면 3~4억이라는 방대한 실업인구가 나타나는 데 이렇듯 되면 중국사회의 생존에 위기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3) 중국사회주의의 발전 전망

중국의 발전여하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점에 의하여 결정된다.

(1) 경제발전전략을 조정해야 한다. 급속 10년의 발전은 반드시 과학기술진보에 의거하여 산품구조와 산업구조를 적절히 하며 지속적이고 균형을 맞추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최근 몇년간에는 발전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수요가 너무나 부풀어 올라 중앙정부로부터 수요를 강력히 축소시켜 인플레이션을 막았다.

(2) 사회주의의 도로를 전제하는 전제하에서 개혁을 강화해야 한다.

· 주식제도, 합작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주의의 기업을 완성시킨다.

· 계획과 시장의 밀접이 결합된 새로운 경제 메카니즘을 모색한다.

· 새로운 경제적 분배 메카니즘을 위입하여야 한다. 평균주의적 분배 원칙을 반대하는 한편 빈부격차 현상의 출현 역시 반대·방지해야 한다. 공평과 효율을 잘 조화시켜야 한다.

· 대외개방정책을 더욱 폭넓게 펴 나간다. 동구경제통합, 그리고 중·한 경제협력과 무역관계의 진일보한 개선에 관해 적극적으로 나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2. 한·중관계의 장래

20세기의 초반에 한국과 중국은 모두 다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았고 20세기 후반에는 공업화를 통한 경제번영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한국은 자원의 부족과 국내시장의 협소함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풍부한 자원과 넓은 국내시장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상호보완성을 가지고 있다. 두 나라 사이의 문화

와 역사 그리고 습관의 유사성도 경제협력을 쉽게 가능케 할 것이다. 두 나라가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면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개선에는 점진적인 방식이 현실성을 갖고 있다. 민간차원에서 정부차원으로, 지방정부차원에서 중앙정부차원으로 문화·학술분야에서 경제 그리고 정부차원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국제경제는 지역통합의 추세다. EC와 북미자유무역지대 그리고 태평양 공동체구상 등이 그 예다. 동북아시아에 있어서도 국가들간의 경제적 상호보완성에 기초하여 한국과 중국 및 북한 그리고 극동소련과 일본, 몽고가 참여하는 동북 아시아 경제협력체가 구성이 시급하다. 이러한 동북 아시아 경제협력체는 동북 아시아의 한·중 경제교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중국 홍콩경제대의 성도인 할빈은 일찍이 러시아와 교류가 있어 왔으며 지금은 소련과의 합작회사가 많다. 최근 소련정부는 원자재수출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합작기업의 경우에는 이 규제에서 예외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한·중국이 중·소합작기업과 협력을 강화하면 소련의 원자재를 수

입하고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한·중·소의 3각 무역이 가능할 것이다. 홍콩경제성은 이런 형태의 협력으로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홍콩경제에는 한국인이 44만명 거주하고 있다. 이 중 약 70%가 본적이 남한이다. 이러한 인적관계도 한·중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이다.

지난 7월 중국광산단 창건 70주년 기념(인민일보)사실이 밝힌 바와 같이 개혁과 개방은 중국을 부강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따라서 사회주의라는 큰 울타리 속에서 발전을 위한 개혁과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심화하고자 한다. 중국은 이 길 외에 다른 선택을 갖고 있지 못하다. 개혁의 경우 경제체제의 개혁에 당장은 다른 점이 없고 있다. 성격의 보존과 배분방식이나 아니라 허브, 헬리콥터, 이따금씩 1600년간 걸쳐(구약 1500년, 신약 100년) 기록된 이 성격은 다른시대(기원전, 기원후) 다른 환경(전쟁, 평화) 등 다른 직업(왕, 어부, 의사, 농부, 세리 등)을 가진 여러사람들(36명)에 의하여 기록되었지만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의 사람을 주제로한 완벽한 합작기업이라 할 수 있다. 내용면에서도 인간과 우주만물의 기원, 죄와

권하고 싶은 책 — 성 경

인간실체에 대한 시야 넓혀줘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책들 중에 가장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되어 가장 널리 배포되었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책들의 하나인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보물창이 되었다. 그러나 이 책이 우리들의 손에 전해지기까지 엄청난 대가가 치러졌다는 것에 대해 관심있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15세기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에는 이 성경을 필사자들이 양피지 등에 베껴써야만 했는데 일급 필사자가 100명을 배가는데 노동자의 일개월 임금에 해당되는 25데나리온을 주어야 했으므로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 전체를 소유하려면 약 6억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였다. 물론 좋은 책의 가치를 돈으로 따지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성경을 일상생활에서 너무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나 공기의 소중함을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하듯 그 가치와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성경은 여러가지 면에서 독특한 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의 보존과 배포뿐만 아니라 허브, 헬리콥터, 이따금씩 1600년간 걸쳐(구약 1500년, 신약 100년) 기록된 이 성격은 다른시대(기원전, 기원후) 다른 환경(전쟁, 평화) 등 다른 직업(왕, 어부, 의사, 농부, 세리 등)을 가진 여러사람들(36명)에 의하여 기록되었지만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의 사람을 주제로한 완벽한 합작기업이라 할 수 있다. 내용면에서도 인간과 우주만물의 기원, 죄와

죽음의 이유, 구원의 도리, 최후의 심판을 분명하게 언급하는 독특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뿐 아니라 성경속에 언급되어진 수많은 사건과 예언들이 역사의 흐름속에 정확하게 성취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예를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 유대인들이 전세계에 흩어져 많은 고난을 당할 것과 그 나라의 회복에 대한 예언대로 약 천구백여년 동안이나 나라없이 유리 방황하던 유대인들이 1948년 약속의 땅인 지금의 이스라엘에 독립한 사건, 6일전쟁으로 인한 예루살렘의 회복, 미래의 회개에 관한 언급이 컴퓨터의 전세계적인 보급으로 현실화되어가는 점, 지식이 많아지며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질 것과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대두 등에 관한 내용들이다.

특히 성경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익숙해 있는 진화론적인 세계관이나 실증주의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인간이란 존재의 실체와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이유, 그리고 인류와 세계의 미래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준다. 분량이 좀 많게 느껴질 수 있지만 책을 읽기에 적합한 이 계절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의 질문과 영원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길을 인도하고 행복한 삶의 방법을 제시해주는 영원한 베스트셀러이며 생명의 양식인 성경을 읽어보길 권하고 싶다.

김형길 경영학과 부교수

게 형성되고 답수체의 수압이 낮아 상대적으로 수압이 높은 해수가 쉽게 침입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보인다.

제주도 지하수법 제정의 방향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① 특정 지역 편중 개발 규제 ② 오염 지원 지역 및 주택가의 개발 규제 ③ 채수량 및 용도의 규제

3. 하·폐수침투에 의한 지하수의 오염

제주도 내에 분포된 화산암은 오염 취약성이 매우 커서 하·폐수에 의한 오염이 심각하다. 검사 자료를 보면 아열산성질소, 암모니아질소, 일산화탄소, 대장균 등 오염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생활오수가 수질오염을 따라 하향 이동하여 하부의 대수층을 오염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4. 지하수법 제정의 당면성과 방향

지역 개발이라는 당면 문제와 관광 개발로 지하수의 개발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관정수 파악은 물론이고 지하수의 용도, 양수량 등에 대해서도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폐기해야 할 관정의 불투수성 공매공사 등을 확인 감독할 기관의 부재로 인하여 인공적인 오염 경로를 제할 위험이 산재해 있다. 따라서 지하수의 개발에서 이용관리까지 엄격한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설문 응답자 중에서 84%가 지하수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Ⅲ. 나오며

제주도의 지하수는 이미 오염이 시작되었고 앞으로는 예전의 청정 수질로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에 앞서서 개발과 관련하여 파생되는 제반 문제의 확산을 방지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을 위하여 다음 몇 가지를 제시한다.

- ① 지하수의 개발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고 보전 대책이 없는 개발을 금한다.
- ② 오염된 관정을 폐쇄하고 중산간 지역에서 용수를 개발, 공급하며 해수면 이하의 심도에서는 채수를 금한다.
- ③ 도의 반출(생수시판 등)을 위한 개발을 금하고 원수료를 징수한다.
- ④ 집단 거주지나 대형 호텔, 공장, 골프장 등 하·폐수가 배출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하수처리 시설을 갖추게 한다.
- ⑤ 지하수의 보전 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한다.

산학협동연구회

□ 제주도 지하수개발실태와 해결방안

과잉양수로 담수층에 해수 침투 동부지역 30개 관정중 12개 식수사용 불능

1. 들어가며

제주도의 전체의 자원인 지하수는 제주도민들의 생명수라 여겨져 왔으며 수질 또한 청정수준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각종 언론 매체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제주도의 지하수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지하수의 고갈, 그에 따르는 해수침입, 수질오염의 문제와 지하수의 상품화 문제가 산재해 있다.

Ⅱ. 들어가서

1. 제주도지하수의 부존과 개발현황

제주도 해안부의 연평균 강수량이 1,568mm이고, 해발 1,000m

이상의 고지대에는 이 보다 2배 가량 더 내리는 것으로 추정되어 강수량은 35억1천6백m³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46%인 16억3천만m³이 지하에 침투하고 그 외는 지표로 유출되거나 증발한다. 가용(可用) 기저지하수만을 포함하는 렌즈체의 총 부피는 2천9백13억m³이나 순수 가용 포장은 73억m³ 정도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산출된 양은 지하수체가 담수와 해수의 균형을 유지하는 조건이므로 실제 이용 가능한 양은 연중 지하수로 침투되는 양 중에서 산정되어야 한다. 지하 침투량 16억 3천만m³ 중에서 바다와 지하로 자연 손실되는 양과 지표로 유출되는 양을 감안하면 실제 이용 한계량은 6.6억m³/년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하수의 개발과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1989년 12월 현재 국가개발이 335공, 민간 개발이 1,408공으로 총 1,743공이었다(농어촌진흥공사 1991년 5월 발표 자료). 지하수 이용 현황은 총이용시설용량 63만4천m³/일 중 46%인 28만8천m³/일을 실제 이용하고 있으며 이중 국가 시설이 21만4천m³/일로서 전체 이용량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확 인된 시설 관정 1,408공은 등록 관정을 통계를 짓지 아니하고 탐문조사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었다)

2. 개발로 인해 파생된 문제

하나, 지하수의 고갈 농어촌진흥공사의 분석에 의하면 해수와 담수의 균형을 고려한 이용한계량은 6.6억m³/년이고 현재 이용량이 0.99억m³/년으로 잔여량이 5.61억m³/년으로서 고갈에 대한 우려를 과잉반응으로 보는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통계는 2년 전의 자료이고, 허위 신고된 수치를 통계화한 것으로 볼 때 현재 이용량은 훨씬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현재 도내 각 지역의 관정은 일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들 관정에서의 과잉양수는 지역적 고갈

을 유발할 수 있으며 지하수의 이동 속도(몇 m~몇십 m/일)를 고려했을 때 저수지에서와 같이 한 쪽에서의 고갈이 다른 쪽의 지하수로 증대되어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과잉양수로 인하여 수위가 낮아진다면 상대적으로 압력이 세어진 해수가 담수층에 침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제주도민의 58.3%가 10년 후 지하수의 부존량은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해서 지하수의 고갈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 담수층 파괴 및 해수 침입 성산읍, 구좌읍 등 제주 동부 지역에 개발한 30개 지하수 관정(국가개발)중에서 22개의 관정이 식수 사용 기준인 150ppm을 초과하고 있으며 식수로 사용이 불가능한 염도인 500ppm을 넘는 관정이 12개소나 된다. 또한 식수 용은 물론이고 농업용수(사용기준 1,280ppm)도 사용할 수 없는 관정들도 있다. 제주 서부 지역(한림읍, 한림면 등)에서도 대다수 관정이 식수사용 한도를 초과하고 있으며 농업용수로의 사용이 불가능한 관정도 있다. 이처럼 제주도내 각 지역의 관정은 일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들 관정에서의 과잉양수는 지역적 고갈

제12회 영어말하기 대회

1. 개최일시: 10월 25일 오후 6시(예선)
11월 8일 오후 1시(본선)

2. 개최장소: 3323세미나실(예선)
법정대중강당(본선)

3. 주 제: 제한없음(원고지10매내외)

4. 원고마감: 10월 6일(국문)
10월 12일(영문)

5. 접 수 처: 영자신문사(본관 3층)
☎ 54-2281

The Islander

◆ 취업·부직희망자를 찾습니다 ◆

직	종 인 원	업 체	부직/취업	보 수(월)	시 간·자 격
제빙	3~4명	(한식)까지식당	계속부직	250,000	10:00~22:00, 16:00~22:00 (백)
부기장사(2급)	여 1명	행정경리학원	취 업	250,000 ~300,000	18:00~21:00
BIT컴퓨터기사	여 1명	BIT컴퓨터	계속취업	월 320,000	10:00~20:30 (6개월과정 이수 학생 4학년 여)
K2 주식주공	남 2명	영업(수입물)	계속취업	기본 300,000 +수당	09:00~18:00 (인문·법정·경상계열)
지도교사	여 2명	아이템플	계속취업	월 350,000이상	08:30~19:00 남포(1명), 모슬포(1명) 포원이수자
경 리	여 1명	경성상사	924~ 10.19	본인과결정	09:00~17:00 (야간학생)
컴퓨터기사	남 1명	아이템플 제주지점	계속취업	300,000	1일 3시간
인 테 리 어 디자인관련	여 1명	신제주미전대장 건축배화점	계속취업	350,000	08:30~19:00
한 글 지 도	남·여 불문 2명	두리두리 제주지사	9.19~	기본200,000 +수당	3세 어린이 한글지도
BOX 포장	남 2명	에버나도식당	10~12월	월20만원	19:00~ 월·일요일 휴무
야 간 당 직		미도파광 여관	부직	1월 120,000 (숙식제공)	18:00~02:00
경리/관리직	남 1명	대영인쇄사	취업	35만원~40만원 (가족수당 +상여200%)	09:00~18:00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매 장 근 무	남·여 각1명	엘칸토	취업	남:50만원, 여:36 만원~40만원 (교통비, 식비 지 급, 보너스 300%, 전세금 500만원 무 상대여, 휴무 월 4 일(선택))	09:30~21:30(순번조기퇴근제) 이력서 1통, 전화

※ 자세한 사항은 장학담당관실로 문의 ☎ 54-2060~1

장학담당관실

여성 문학상 공모

여성의 해맑은 웃음을 위한 글을 모집합니다.

■ 모집부문 ■

- 시 (3편이상)
- 단편소설 (원고지 100매내외)
- 수 필 (30매내외)
- 독 후 감 (30매내외-고등학생에한함)
- 시상내역: 대상 30만원, 부문별 각자 10만원
- 대 상: 도내에 거주하는 대학생 및 고등학생
- 마 감: 1991년 10월 20일
- 발 표: 추후 개별 통고
- 보낼곳:

제주도 제주시 아라동 산1번지
제주대학교 총여학생회
☎ 54-2364

※응모요령※

절본에 '여성문학상응모작품'이라고 기재,
연락처 기재, 방명점수 또는 등기우편점수
접수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최: 제주대학교 총여학생회

□ 취업문제 진단—고용정책의 변화

인턴사원제로 지방대생 취업 비상 ‘채용할당제’도 본교생에게 별 혜택 못줄 듯

—(글 실는 차례)—

1. 취업난과 우리학교 취업실태
2. 고용정책의 변화
3. 직업변화와 유망직종
4. 도내의 기업현황
5. 우리학교의 취업대책
6. 여학생 취업대책
7. 취업난에 대처하는 대학인의 자세(좌담)

I. 91년도 인력채용 동향

주요기업, 그룹 및 은행들이 아직 채용규모를 확정짓고 있지 않아 고용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그중 50대 주요그룹 6백85개 계열기업들의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인원은 총2만4천여명으로 작년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각 기업들은 경제침체와 증권파동 등의 여파로 채용인원을 대폭 감축, 사상 최악의 취업불황 사태를 빚은 데 반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전산업의 종업원 5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8백21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자료인 '91년 신규인력 채용동향' 및 전망조사에 따르면 올해의 신규인력 채용은 전년도에 비해 2.3%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사무직의 경우는 오히려 4.5%정도 감소될 전망이다. 이에 비해 기술직 및 생산직의 신규채용은 각각 6.1%와 5.1%정도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견이다.

또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의 신규채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자체 실시를 계기로 지방공기업법, 농공단지 조성으로 지방도시에서 중소기업 창업이 활발한데 따른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상반기 전국 신설법인 현황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4천2백56개사가 창업해 작년보다 4.9% 증가한 데 반해, 지방은 2천79개사로 4.5%나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편 신규인력 채용전망을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숙박업과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전산업 부문에서 작년에 비해 약간의 증가될 전망이다.

전체적으로는 전년도에 비해 채용전망은 나아졌다고 볼 수 있으나, 이제까지의 '취업재수생'(작년말 공식실업률 2.6%, 비농가실업률 3.1%, 47만명중 21%인 약 9만 1천 7백여명, 전직화망자가 늘어날 것을 고려한다면 '전직'을 방불케할 취업난이 가일층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II. 각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동향

최근 전국 주요기업들의 하반기 신규채용계획에 따르면 계열사의 역할비중을 크게 높이는 한편 인턴사원제, 무시험채용 및 서류전형, 인성·적성검사 등의 전형방식을 도입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이기도 한 지방대생들의 취업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1) 인턴사원제

올해 여름은 방학기간을 이용, 각 기업들이 사원연수, 사원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인재를 고르는 데 열심 경쟁을 벌였다. 이것이 이루어져 '인턴사원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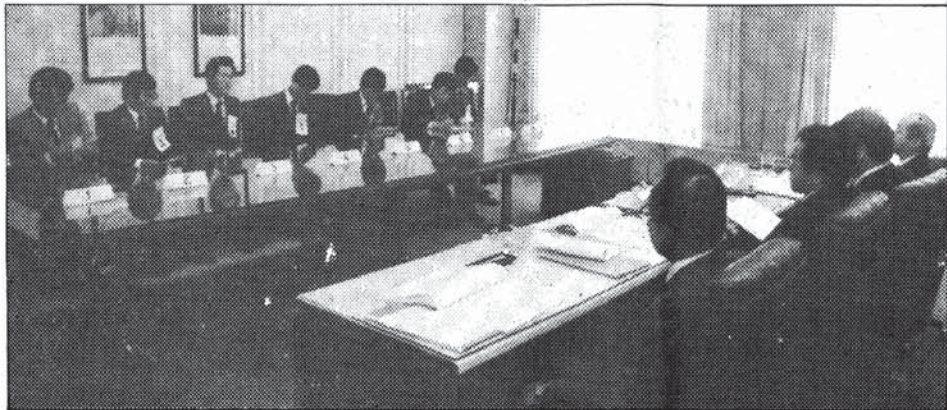
지난 84년 력기금성그룹이 최초로 도입한 이 제도는 졸업생 한 학기 남겨둔 대학 4년생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현장실습을 시킨 뒤, 이들에게 취업 때 우대해주는 일종의 예비사원 실습제도로 할 수 있다. 처음 도입할 때만 해도 실통하지 여겨지지 않았지만, 최근 기업들의 노사관계, 인력난등과 겹쳐 인기를 얻기 시작, 채용규모도 30%정도 늘어났다.

이 제도가 △대학생과 일반인들에 대한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동시에 대학의 우수인력들로 하여금 산업현장의 주요시설과 생산라인등을 직접 견학할 수 있도록 장차 입사하고자 하는 회사의 업무내용이나 근무분위기를 미리 익혀줌으로써 불확실한 이공계열과 급진력을 기업에 필요로 하는 만큼 확보 가능 신입사원 후보자들의 기업관·사회관 등을 몇주에 걸친 실습을 통해 면밀히 관찰할 수 있어 격렬한 노사분규까지 등의 이점을 경영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할 것 같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업마다 특성이 있지만 대체로 인턴사원의 응시자격은 학업성적 우수자(B학점 이상), 학과장추천서 소지자, 군필 또는 면제자로서 인문계열과 이공·상경계열의 비율을 3:7로 제한하고 있으며, 추천→서류전형→면접 등의 전형절차를 보이면서 남학생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턴사원 추천의뢰가 이공계열과 세칭 일류대학에 편중되는 현상과 관련하여 비명론대, 지방대, 비인기학과, 여학생, 취업재수생에 대한 기회부여가 차등되고 있다.

특히 이번 실시된 인턴사원제의 서울소재대학과 지방소재대학 재학생의 구성비가 7:3정도로 파악된 것으로 미



◇요즈음 각 기업들은 면접·적성검사를 학교성적이나 필기시험보다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뤄보아 지방대생에게 미치는 불이익은 치명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대부분의 기업체들이 이미 인턴사원을 선발, 상당수를 채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인턴사원추천에 오르지도 못한 지방대생들에게는 취업문이 더욱 좁아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대생들이 공개채용에 있어서도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취직시험 응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거나 △이름이 성적이 좋아도 서류전형에서 탈락되는 사례가 많고 △서류전형 통과하더라도 면접에서 탈락당하는 불이익이 있었지만, 인턴사원제까지 합세해서 지방대생의 취업문은 더욱 좁아질 것임이 확실하다.

연남대학교인 경우 89명이 올해 여름방학동안 대우·력기금성등 대기업에 인턴사원으로 채용되는 등 육지부지방 대학에는 그나마 비교적 인턴사원 추천의뢰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학교는 대우그룹에서 인턴사원 추천의뢰가 들어오긴 했으나 대우가 있으나 각 대학별·학과별 추천현황이 전혀 집계되지 않고있다. 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전국적 수준에서 크게 떨어진다 것을 미루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학교측은 물론 학생측에서도 인턴사원제에 대한 별다른 인식과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있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인턴사원제가 지방대생 취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학과·단체학생과·본부취업담당부서와의 긴밀한 관계로 정확한 취업통계를 작성, 올바른 취업대책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노동부에서는 지난 9월4일 정부투자기관의 신입사원 채용시 일정 비율이상을 지방대출신으로 충원케 하는 '채용할당제'를 유효한 취업법령으로 실시할 것을 발표해, 지방대생 취업에 호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말이 있다.

이는 본사주요생산공장이 지방에 있는 일반 민간기업, 지사·지점등의 지방 사무소가 없거나, 지방사무소의 정원이 서울본사 근무인원보다 적은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는 채용인원의 50~60%를 지방대출신자로 채용한다는 것이다. 유효기간은 24개 정부투자기관에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으로 전국 3천여명에 해당하는 지방출신 대졸자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조치도 지사나 지점이 별로 없는 제주도의 상황에서 우리학교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2) 면접·적성검사의 강화

기업의 생명은 곧 인력이다. 따라서 각 기업에서는 인력의 능력이나 적성이 그 기업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판정하는 적성이나 인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대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적성검사는 자기적응·직무적응·직장적응의 3가지 측면이며, 일반 기초능력검사, 성격검사, 직업흥미검사, 성격적응력검사 등이 있다. 기업문화와 직무내용에 따라 중시하는 부분도 틀려지겠지만 정신건강, 의욕 정도 혹은 적극성 등을 강조사항으로 두어 업무의 생산성과 구성원간의 유대를 꾀하고자 하는 추세다.

이러한 적성검사는 1차선발, 면접등의 채용과정에서 활용되며 적성검사의 결과는 학력점수나 면접의 결과에 비해 중요시 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인제관 및 채용양상이 학교성적이나 필기성적에 의존했던 것에서 탈피, 과거 형식적인 필자에 불과했던 면접시험의 비중을 크게 높여 당락을 결정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면접은 보통 선발인원의 1.5배~3배수를 선발해 지르게 되는데 방법도 개별면접, 단독면접, 집단토론편접 등으로 각 면접마다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지만, 요즈음에는 집단토론편접을 통

해 리더십·판단력·설득력·논리력·협동심을 평가하는 기업이 점차 늘고 있다. 또 2차에 걸친 면접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1차는 실무진, 2차는 중역진으로 나눠 엄격히 보며, 보통은 자신의 목표·회사선택 동기·가족관계·성격·경력·취미·오락·전공 등에 관한 것을 중점적인 평가요소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겠다.

3) 지방공무원의 남녀채용 차별 철폐

지난 6월18일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이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신규채용에 남녀 성차별의 원천 철폐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에따라 종전 지방공무원 채용할 때 필요한 경우 지방일선행정의 특성을 고려, 성별분리모집을 할 수 있던 것이 앞으로는 규제가 가능해졌다.

지난 89년 국가공무원 임용의 성별분리모집이 철폐된 이래 실시되는 이 제도는 앞으로 진행될 기업체 민간 분야의 사원채용과 관련한 성차별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직 남녀고용평등법이 확실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 하는 것은 기업들의 인식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III. 본교생의 도내기업 추천현황

장학담당관실의 취업관련 자료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상반기까지 남학생이 2백41명, 여학생이 56명 등 총2백97명이 도내 기업체에 추천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별로 보면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인문계열보다 이공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단대별로는 경상계열이 압도적으로 많고 수·해양 계열, 전자·전기·통신계열도 차차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학담당관실

‘교수평가제’ 유감

교수도 ‘무소유적 경청자’ 돼야

어느 대학 교수는 '교수 강의 평가제'에 대해 "배우는 과정에 있는 무경청자가 가르치는 사람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수강의가 평가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위의 인용 구절을 바꾸어서 표현하면, '배우는 과정에 있는 학생은 아직 미숙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성숙한 교수를 바르게 평가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필자가 이 말을 인용한 것은 누구의 말도 아니라 붙잡고 늘어지는 심술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러한 평가를 받으며 자신을 되돌아 보아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수정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다만, 그러한 평가상의 일면을 조직적인 집단 속에 들어오면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소위 '평가 제도'인 것이다.

우리는 '철심 합이버지도 세살 손자에게 배운다'는 옛 말을 기억한다. 그렇다면 교수가 학생으로부터 강의에 대한 호의·호감을 받기 위해 무슨 수를 써야 할까? 난단 말인가! 문제는 '학생이 교수를 평가한다'는 말의 위양성에 있는 것 같다. 학생한테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권위 교수와 권위가 실추되고 또한 자신감이 꺾인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평가 결과가 좋았든 나빴든간에 교수 자신이 학생의 비판의식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교수의 프라이버시를 침해받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학생이 교수를 평가하고

자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학생이 교수의 강의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교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은 교수의 강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나



전할 길이 마땅하지 않다.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는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갖되 거스르지 않는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수의 면전에서서는 아무런 말을 못하면서 뒷전에서 '속여공론'을 하며 교수를 비판하게 된다. 그리고 스승에 대해 학구한 한 자신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바르지 못한 의사 전달보다는 몇몇하면서도 강력한 힘을 가진 집단의 사를 전달하자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 학생들에 의한 '교수강의 평가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수의 강의를 듣기만 할 경우, 교수는 신이 나서 강의할지 모르나 학생들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거나 원하는 내용에 대한 학습욕구가 좌절되기 때문에 교수에게 불만을 갖기 쉬우며, 이러한 불만이 쌓이게 되면, 학생들은 진심으로 교수의 강의를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민감한 교수란 교수·학생과

정에서 학생의 요구를 자유롭게 받아들여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함이 없이 자기의 지적이고 이론적인 틀로 강의에 입할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강의에 대한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받고 있다. 매 수업시간마다 쪽지를 나누어 주어 학생들의 출석을 체크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강의내용이나 방법을 전달받고 있으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시간 학생들에게 피드백 해주고 있다. 이것이 곧 교수와 학생간의 대화라고 보기 때문이다. 집단상담에서도 상담 종료시에는 반드시 피드백(송환 효과)시간을 갖는다. 여기서 참여자 각 개인에게 집단활동을 하는 동안 대인관계에서 보고 느꼈던 점을 있는 그대로 개인에게 전달함으로써, 개인은 자신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이를 수용함으로써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상담자(leader)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학생들은 교수와의 따뜻한 대화를 통해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싶어한다. 계속적인 교수·학생간의 대화만이 '교수 평가제'의 말을 사라지게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수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강의 개선을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학생생동이 어떠한 의견을 수렴하고 노력한다는 자체에 중요성을 두어야 한다. 이제 교수도 학생의 말에 대해 '무소유적 경청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학생생활연구소 조교수

더욱 심해 학교측의 취업대 기도 하다. 책 마련에 결심들이 되고 있 【고희갑기자】

有大漫評



바로 지금입니다. 좋은 시절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사랑, 학문, 사상, 방황에 이르기까지
바로 지금 뜨겁게 빠져들어야 할 때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대학시절은 단 한번밖에 없는, 황금과도 같은 4년간의 휴가라고 합니다. 이 젊은이 4년을 그냥 막 아무렇게나 써버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흔히 젊은 지성을 일컬어 뜨거운 가슴, 차가운 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식어버린 가슴과 텅 빈 머리로 하루하루의 시간을 그냥 죽이고있지는 않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만이 자기의 꿈을 꽃피울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밤을 꼬박 새워도 좋습니다. 잔디밭에서 하루종일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아도 좋습니다. 술잔을 돌리고 누군가와 토론에 몰두해도 좋습니다. 바로 지금, 삶을 향해 세상을 향해 당신의 뜨거운 정열을 보태보십시오. 소련하루어는 말했습니까. 「보통사람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에 마음을 쓰고, 재능있는 인간은 시간을 이용하는데 마음을 쓴다.」

작은 꿈도 소중히 하는
국민은행



의견수렴... 좌석독점 해소책 마련할터 이용자 자율적 통제가 전제돼야

이 글은 지난 427호(9월 17일자)의 '독자의 소리'에서 제기된 도서관 열람실 자리에 독점적인 도서관 열람실의 답변이다.

본교 도서관 자유 열람실의 자리독점 문제는 자유방임식 열람실을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에서도 문제가 되어 왔으나 가능한한 이용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약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규정의 취지가 결코 이용자를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반대급부적인 편의와 이용권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적어도 대학도서관이라고 한다면 자율적 조정과 분위기가 바람직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근자에 더욱 자리독점으로 명량한 분위기가 깨어지고 있음은 재대입구의 한사각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일견 변화율이 높아지는 독서의 계절을 맞아 "그러나" 하는 면도 있으나 규정

을 무시하고 독점적 사유를 그날그날 가거나 다수의 힘으로 좋은자리(?)를 독점한다면 이용기회가 균등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는 도서관으로서의 남다른 실정이다. 본교 도서관 자유열람실 좌석독점의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 몇가지는 칸막이 시설의 증설, 열람실별 학년지정좌석제, 칸막이 시설 완전철거등을 들 수 있으나, 예산등이 수반되는 방안은 상충부의 결재가 필요하며 이용자들이 (특히 재학생)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되어야 하므로 선택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평소 이용 자제에 더 좋은 해결책이 있다면 이 기회에 서슴없이 도서관으로 알려주시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상기한 해결방안 그 어느것 하나도 자율적 조정과 대학인다운 지성인의 면모가 발휘되지 않고서는 전 재대입구의 이용자 민심의 열람실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더 좋은 자리를 위한 다툼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진춘배 도서관 열람실)

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리었는데, 지금은 이말이 옛말로만 들리는 것 같다. 학생들도 담당교수님에게는 인사를 하더라도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낮이 익어도 인사를 잘 안 한다. 식사를 받을 때 "맛있게 먹었습니다"라는 인사말이라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광호 아저씨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아저씨들보다 2배 이상의 일을 하신다. 식당주변과 학생회관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하루에 경운기로 2대, 3대씩 나운다고 한다. 고생하시는 아저씨를 위해서 담배꽂조

하나, 점들을 아무곳이나 버리지 않는 것이 아저씨들을 도와 드리는 것이다. 지난 27일에는 학생회관내에서 활동 학생들 스스로가 청소를 하였는데 무척이나 보기가 좋았다. 이런 일이 형식적으로 그치지 말고 앞

으로도 계속하여 학생들 스스로가 청소하고 책임있는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 모두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알고 항상 고마운 마음가짐으로 생활하자.

(김동규 후생과 행정서기)

미국, 자국민 여론에 밀려 핵폐기 핵 철수정책 불구 한반도 핵우산 계속 미-노일당 북한흡수통일 음모분쇄해야

전국 중앙지 신문 1면에는 모두 놀랄만한 특종기사가 실렸다. 부시 미국대통령의 단거리전술핵 폐기선언이 그것이다.

서방언론과 정부에서는 세계평화의 결단이라고 전세를 보내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핵폐기지역은 유럽과 동북아 즉 남한을 중심으로 이루어 진다고 한다. 놀랄만한 일은 이전까지 남한정부에서는 남한에 핵이 없다고 자라면서 북한의 핵안전협정, 핵사찰등을 확대 보도하고 UN가입으로 국제제대, 통일을 운운하며 북한에 대한 온갖 흑색전선을 서슴치 않았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운을 때면 한국정부는 법석

을 떨고 입을 다물라고 하면 대문지방을 질러넣듯이 조용해지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것을 단편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단거리전술핵을 폐기한다고 선언해 놓고 소련에게 기술적으로 뒤지는 핵분야만 폐기를 선언하고, 또 미국내에서 국민 여론에 부딪혀 어쩔 수 없이 폐기해야 되는 것을 세계평화를 위하여는 양 당당하게 선언하고 소련의 핵폐기를 전 세계적 여론의 힘으로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친미서방언론의 힘은 대단하다.

그러나 어찌구무는 것은

이렇게 단거리전술핵을 폐기해도 남한은 비핵지대화되지 않고 미국의 핵우산영역하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점이다. 바로 이것은 미국의 끝까지 북한을 핵사찰·핵안전협정을 전세계적인 여론으로 유도하여 미국-노태우정권이 북한에 대해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고립시키자는데 목적이 있다. 미국-노태우정권은 UN시대, 통일시대를 열자고 걸으며 떠돌아다녔지만 한반도에서는 군사력 우위를 통한 통일정책으로 북한을 고립화하여 힘을 약화시키고 흡수통일을 하려는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제 우리는 미국-노태우 일당의 음모에 맞서 통일이나 반통일이라는 것을 통일문제의 핵심으로 삼을 것

사람들 - 전대협위원장 어머니 안옥희씨 "국민지지받는 운동으로 참승리 쟁취해야"

"이제 학생운동은 시대의 흐름을 참작하여 국민의 호응,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운동의 방향을 설정할 때 비로소 진실된 승리를 안아 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난 9월 27일 전대협전의 일환으로 인문대학생회가 주최한 '백만학도 어머니 초청강연'이 우리학교에 오게된 제5기 전대협위원장 김종식 학우의 어머니 안옥희씨를 축하행사무실에서 만나 몇마디 얘기를 나눴다.

"학생들이 참 밝고 건강하게 보여 무척 반갑습니다"라는 말로 우리학교에 대한 첫인상을 얘기하는 안씨는 "종식이고 전부터 제주에 무척 오고 싶어 했어요. 지금은 나 혼자 왔지만, 통일원년이 되기전에 종식이고 꼭 이 잡지를 읽는 남도를 방문하게 되리라 믿어요."라며 '95년 통일원년이 돼야 한다고 열렬했다.

또한 얼마전 경찰의 강경시위진압으로 인해 서울대학원생 한학원씨가 경찰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는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결과적으로 시위학생들에게 총을 쏘았으니 정권의 살인마적인 행동"이라고 규정 이에 대한

언론의 왜곡보도는 정권의 시위로 전락한 제도언론의 실상을 단적으로 드러낸 예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안씨는 부인측이 직장마련과 장례식 문제등에 대해 1억원으로 합의하고 만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기만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안씨가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활동을 시작하게 된



안옥희씨

것은 지난 7월8일 김의장이 구속되면서 부터다. 그동안 감경대열사를 살해한 전경의 재판때 법정마당에서 봉성한 것을 비롯, 줄곧 박종철·김종대열사 아버지 와 여러 양심수들의 재판에 참석해 왔으며, 교도관이 여학생을 집단 구타한 사건이 일어났을때에도 구치소장을 만나 담판을 치고 사과를 받아내는데 등 양심수들을 위해 끊임없는 투쟁활동을 해왔다.

환원리가 하나, 풀 보이

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김

의장 못지않은 굳은 투쟁의지를 보이는 안씨는 "10월1일부터 10월7일까지는 전국 양심수 단식 예정일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민가협 어머니들도 정당사수 형의봉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대협가족 11명의 재판 준비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안씨는 "학생들은 결코 일선상의 이익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들도 의식주의 해를 위해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한 공부만 자식들에게 강요하기보다는 아들·딸들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지요"라며 학생운동에 대한 어머니들의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때임을 강조했다.

김의장이 대학1학년때부터 자취를 한택에 전에는 한담에 적어도 두번은 전주에서 서울 출장을 했다는 안씨는 잘라진 한반도 철창속에서 조국의 통일을 외치고 있을 김종식의 장을 면회하기 위해 "이제는 전주에서 서울보다 더 먼 길은 서울만의 혼돈은 큰 애(김의장형) 자취집에서 안기부까지 다녀야 한다"며 마디 굵은 손을 불끈 쥐었다.

【愚】

뒤에서 고생하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새벽 5시30분이면 일어나 조기에 가서 출근을 한다. 운동을 마치고 오면 밥먹을 시간도 없이 네타이를 대중매고 출근길에 나선다. 그래서 학교에 와서 아침 식사를 하는 편이 많다. 아침 8시30분이면 식권을 사서 아침식을 한다. 나자신도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때는 주방에서 일하시는 아줌마 아저

씨들에게 고마움을 못 느꼈었다. 새벽 5시30분이면 출근해서 우리들의 아침식사를 준비하고 저녁식사가 끝난후 식당정돈을 하고 다음날의 일을 준비한후 저녁 7시30분이면 퇴근을 한다. 한번쯤은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생활하자. 우리나라는 예

를 하고 입을 다물라고 하면 대문지방을 질러넣듯이 조용해지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것을 단편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단거리전술핵을 폐기한다고 선언해 놓고 소련에게 기술적으로 뒤지는 핵분야만 폐기를 선언하고, 또 미국내에서 국민 여론에 부딪혀 어쩔 수 없이 폐기해야 되는 것을 세계평화를 위하여는 양 당당하게 선언하고 소련의 핵폐기를 전 세계적 여론의 힘으로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친미서방언론의 힘은 대단하다.

그러나 어찌구무는 것은

"전대협과 함께면 든든"

김종식의장 어머니 초청강연을 보고

역수로 비가 쏟아졌다. 라디오 일기예보에선 태풍이 북상 중이라 했다. 웃고웃을 때는 손이 파르르 떨었다. 특별법 저지와 완전한 민족통일을 위한 '진안제전' 첫째날 행사인 김종식의장 어머니, 안옥희 여사의 초청강연 사회를 보게 된 것이다.

평범한 반도평의 아나에서 이제는 구국의 강철대오 전대협 백만학도의 어머니가 되신분, 안옥희 여사. 그러나 그 분은 위대하지도 화려하지도 세련되지도 않은 우리들의 어머니, 어느 때라도 포근히 우리를 감싸 주실 보호의 우리를 어머니였다.

아들이 가는 길이 외로운 길이었기에 이제 아들이 못다 한 활동을 대신해서 하고 있을 뿐이라는 어머니. 그러나 정작 나를 올린 것

은 그 분의 달변이 아니라 우리학교 학우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수감중인 당신 아드님의 목소리를 녹음해 오신 것이었다.

아! 유리벽 저편에서 어머니의 가박까지 그리도 먼 거리였는가. 우리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은 응유거림 속에 간간히 섞여 나오는 '제총협', '위생군의장님', '열심히 투쟁...'등 몇 마디였다.

그러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더욱 중요했던 것은 쇠창살 저편에서도 의연한 목소리로 제주의 학우를 격정하는 의장님이었고, 그러한 마음을 전하고자 위험을 무릅쓰고 녹음시켜 달려오신 어머니였으며, '그러한 어머니를 만나보기 위해 죽음을 뚫고 '폭풍의 언덕'이라 불리는 인문대학에 모인 학우들이었다. 그 삼위일체가 감동

이 되어 나를 울렸다.

그것은 전대협의 또 다른 신화가 아닐까. 족속 속에서 전대협 출범식을 시수했듯이, 맨몸으로 전국을 달려 원천봉쇄망을 뚫고 범민족대회장에 모였듯이, 밤을 꼬박 새우며 통일노래한바탕을 마쳤듯이 전대협 백만학도의 힘기에 가능한 일들이었다.

그러한 힘이 있기에 노정권이 전대협을 두려워하여 왜해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들은 그를 앞에 당당히 '조금만 더 쳐다오, 시퍼렇게 날이 설 때까지'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들의 그 힘은 머지않은 결전의 날에 '전대협'이라는 이름으로 찬란히 빛날 것이다.

아직도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속처럼 귓가를 울린다. '전대협과 함께하면 이 엄마도 든든하다'

(김유경 국어국문학과)

알림

중간고사 관계로 2주간 휴강하고, 제430호는 오는 10월22일자로 발간됨을 알려드립니다.

알아봅시다

각종 학력증명서 발급 절차

학력증명서는 졸업 수료 졸업예정 재학 성적 재적 교원이나 학위증명서로 구분되며 한글 또는 외국문으로 발급한다.

학력증명서는 교무처장의 명의로 발급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총장 또는 학(원)장명의로도 발급할 수 있다. 학력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원하는 증명서 교무처에 소정의 수수료와 납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한글증명서인 경우에는 전하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학력증명서는 학적부 및 졸업대장에 기재된 사실을 기록 대조하고 해당란에 각각 날인하여 발급하며, 한글학력증명서의 발급기간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고, 외국문 증명서도 24시간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다.

졸업예정증명서인 경우에는 4학년 최종학기에 재학중인 자에 한하여만 발급한다. 【취재부】

역사의 주체로 서자

누구나 '대학발전기금조성'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 × ×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100원 밖에 없는데..."

"승차권도 받아줄까?"

"야! 너 미쳤니? 현금하게"

"우리가 왜 대학발전기금을 내야 돼!"

× × ×

한 번쯤 상상해 볼 수 있는 광경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관객일 수만은 없습니다.

